

# 실망노동자와 실업률

이상학

전(副) 대한교육보령노조 위원장

## 몸과 마음이 불안한 시대에

경제가 깊은 침체의 수렁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우리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국내 유명 대학 졸업자들조차 취업을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고졸자를 채용하는 시험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은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게 되었다. 일자리 부족은 취업을 못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정리해고,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시도로 인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요컨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실업률이라는 수치로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업률이다. 실업률이 높으면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중에서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2.5%(계절조정 전)를 기록하고 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에 2.5%가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기 싫어도 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 2.5%란 전체 국민 중 2.5%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일할 의욕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비율이 2.5%라는 말이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생산가능인구라 하고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만15세 이상을 생산가능인구(만15세 인구 중 현역군인과 방위병,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 그리고 외국인은 제외함)로 평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학생, 가정 주부, 노약자, 불구자, 불로소득자,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뺀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이렇게 계산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숫자를 실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자란 무직자로서 최근 일주일(조사 대상기간) 동안 일거리 찾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 가능한 자를 말한다. 또한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대상 주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한다.

취업자란 최근 일주일 동안(조사대상기간) 수입이 있는 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농장에서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그리고 일시적인 질병, 휴가, 연가,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직자를 말한다.

### 통계의 허점과 실망실업자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에 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실업통계는 실망노동자의 문제 이외에도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 짧고, 실업자에 대한 개념이 엄격하고, 무급가족종사를 비롯한 불안정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 숨겨진 실업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인지 비경제활동인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에 반해 실업자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차이는 일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학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각의 노동자가 일과 여가를 선택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은 힘들지만(비효용) 노동의 대가로 임금(효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힘든 일을 하지

않아 효용을 높일 수 있지만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비효용이 있다. 사람들은 일을 하여 임금을 받는 효용과 일을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면서 누리는 효용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체적인 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을 하는 것은 힘들고 하기 싫은 것으로 비효용이고, 여가를 가지는 것은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있음을 물론이다.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 효용을 높이는 선택이기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기보다는 여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은 여가보다는 돈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 직장을 구하여 일하는 것보다 효용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전제품의 발달로 집안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가정 주부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러한 논리로써 설명할 수 있겠다. 보육 시설이 발달하면

어린아이를 가진 가정 주부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더 적은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기보다는 보육 시설에 맡기고 더 큰 효용을 주는 경제활동에 나서게 된다. 보육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버는 일보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하였으나 보육 시설이 생기면서 가정 주부는 자신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어 큰돈을 벌게 되자,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취미생활 등 여가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였다면 이 사람이 한 결정도 이러한 논리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결과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게 되는 것일까?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 주부, 취학 중인 사람,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이와 같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다. 자신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를 실망노동자라고 한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이다. 일자리를 가지고 싶지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동

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가지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포기하고 있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실망노동자를 추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과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실망노동자의 숫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국의 실망노동자에 대한 분석은 논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우현 등은 실망노동자의 비중이 실업자의 7~8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강식(한국노동연구원: 1997)은 한국의 실망노동자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우현 등은 1984년과 1987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고용구조특별조사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망노동자가 완전 실업자의 7~8배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반면, 최강식은 92년도의 실망실업자가 0.9%(고용구조 특별조사 보고서, 통계청)이고, 96년 실업률이 2.0%(경제활동인구연보)임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망실업률이 높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최강식은 나라간 비교에서도 한국의 실망실업률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반된 두 주장이 보여주는 분석결과의 큰 차이는 한국 실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기인하는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실망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위의 두 주장은 그들이 사용한 통계자료의 시기가 상당히 달랐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가 하락하고 취업이 어려울 때에는 실망노동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90년대 초에 비해 경기침체와 가업의 구조조정, 기술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최근의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비해 실망노동자가 훨씬 많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상에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버린 실망노동자는 통계상의 실업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접두되는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낮고, 국가간의 비교에서도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은 매우 높다. 통계상의 실업률과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의 차이가 적지 않다. 공식 통계와 우리가 희망으로 느끼는 실업률간의 차이를 실망노동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망노동자는 현재의 실업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